

한중일 표준협의체 발족

지난 5월 29일 제주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이 선언한 표준협력 공동성명의 일환으로 3국간 국장급 표준협의체 발족 서명식('10.12.21 일본 삿포로)을 갖고 제1차 표준협력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표준협의체 발족으로 3국 표준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구체화하여 무역촉진 및 기술 장벽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총표준수	ISO와 부합화된 표준수	일 치	수 정	불 일 치
한국	23,353	10,844 (46.4%)	9,887 (91.17%)	539 (4.97%)	418 (3.85)
중국	25,075	5,473 (21.8%)	3,067 (56.06%)	1,494 (27.31%)	910 (16.63%)
일본	10,827	5,673 (52.3%)	3,990 (70.33%)	1,540 (27.15%)	143 (2.52%)

한중일 3국 표준협력 MOU 주요 내용은 국장급 표준협의체(Standing Committee) 정례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 및 3국 표준의 조화, 민간 전문가 교류활성화, 동북아표준협력 포럼 확대 개편 등이다. 한중일은 문화적 차이와 산업화 배경이 달라 국가표준체계가 상이하다.

이번 MOU 배경은 EU 및 북미권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 축으로 성장한 한중일 3국간 최근 FTA 논의가 급진전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대비하여 한중일

표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것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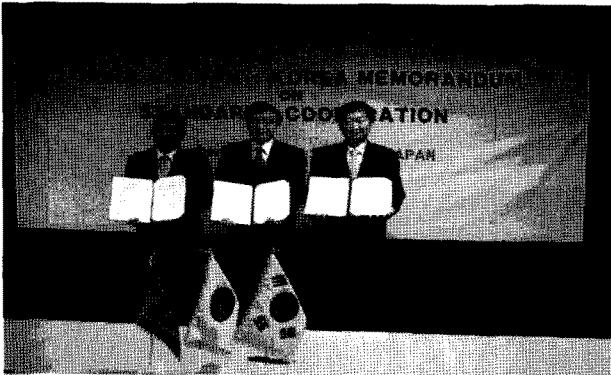
3국의 교역량은 세계 GDP의 16.8%, 세계 교역량의 15%('08년 기준)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고, 3국의 대외 무역 총액 (2조달러) 중 역내무역 비율이 58% (NAFTA(55%) EU(66%))이다.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공산품에 대한 안전 유해성 강화 등 기술규제 확대에 대하여 한중일 3국은 표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특히, 3DTV, 전기자동차 등 미래 세계시장 주도 분야 및 한중일 문화적으로 공통배경을 가진 연관기술 등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의 연구부터 제정단계까지 3국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였다.

화물컨테이너 RFID, 원자력, 조선, 자동차블랙박스, 고령친화용품 5과제 대해 한중일 조화표준화 과제로 선정하여 한국 주도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 3국 개별 개발비용 200여억원의 절감이 예상되며, 관련 국내 기업은 한중일 협력으로 5조원대 국제시장 선점 예상이 기대되는 것이다. 한중일 표준협의체 결성 서명식 이후 개최된 제1차 표준협의체 회의에서 표준협력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국장', 중국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SAC) '시바오취엔 부위원장', 일본 경제산업성(METI) '타츠오 야마모토 국장'은 3국간 표준전

문가 상호파견과 같은 인사교류와 3국 산관학 조화표준 공동연구를 병행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3국의 상호호환이 가능한 표준화가 추진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내무역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대폭 감축할 뿐만 아니라, 시장단일화 촉진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인증산업의 고부가 서비스산업화를 통한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10. 21. 21(화) 산·학·연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합성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인증산업은 표준 및 법적기준(안전, 환경, 성능 등)을 충족하는지를 인증해주는 엔지니어링 컨설팅산업이고, 적합성평가는 시험, 검사, 교정 등을 통하여 표준 및 기준에 합치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인증산업은 WTO 이후 지역별 FTA로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무역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무역자유화 흐름에서도 비관세장벽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각국의 TBT 제도에 대응하여, 자

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높은 제조업 비중 등 풍부한 잠재시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노하우 등 국내인증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95년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내 인증발급 업계의 경영구조 악화, 국내산업의 수출비용 증가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의 인증관련 제도 역시 부처내, 부처간 산발적 운영으로 각국의 TBT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우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포럼은 '10.11.1일 기술표준원내 전담국(적합성정책국) 출범 이후 산·학·연 전문가와 공동으로 적합성정책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첫 자리이다.

국가간 MRA 등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인증관련 규제완화 및 시장원리 강화를 통한 인증산업 자체의 발전 등 인증관련 수요부분과 공급부분의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과 함께, 국가 단일인증체계, 관련법률 제정 등 정부의 관련 지원제도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방향 제시가 있었다.

금번 포럼을 향후 정책 개발시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 내년 1/4분기까지 기술표준원내 KOLAS, KAS, KAB 등 3개의 인증제도 통합 및 각 부처 인증제도와의 범부처간 통합을 포함하여, 국내 인증산업의 글로벌화, 중복 인증 해소, MRA 우선순위 국가 및 품목 도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합성 정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LAS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시험기관인증)이고, KAS는 Korea Accreditation System(제품인증)이며, KAB는 Korea Accreditation Board(시스템인증)이다.

국제표준화활동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국제표준화 활동에 공이 큰 전문가에 특별 공로패를 수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협의회”를 12월 14일 개최했다. ISO, IEC, JTC1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 간사 등 국제임원의 모임체이다.

최근 세계 표준전쟁의 중심이 미국·유럽연합의 BIG 2에서 한중일이 포함된 체제로 개편되는 국제적 질서를 감안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였다.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이고,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 전기기술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정책위원회 임원 7명, 기술위원회(TC) 의장 18명, 간사 19명 및 컨비너(작업반 의장) 63명 등 총 107명이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 국제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기술장벽(TBT) 협정 이후 표준이 비관세 장벽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표준 선점을 총성 없는 표준전쟁으로 비유하며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우

리나라도 2015년까지 세계 7위권의 글로벌 스탠더드 주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 의장/간사 수임수(37명)는 세계 12위 수준으로, 본 협의회에서는 세계 7위 목표달성을 위해 표준 - R&D - 특히 연계 개발, 산업계 참여 지원 및 국제전문가 양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ISO, IEC, JTC1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핵심 요직인 의장·간사·컨비너로 활동하면서,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켜 우리기업의 수출을 확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였다.

선박해양기술(ISO/TC8) 선박 디자인(SC8) 분야의 국제의장과 해양환경보호(SC 2) 분야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창(한국선급 전문위원)은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발한 참여가 조선 산업 세계 일류로 성장하는데 일조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국제표준화를 활동하기 시작한 90년 말부터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이 되어 국제표준화 활동의 초석을 닦고, 2010년 IEC에서 국제표준제안 건수 세계1위로 등극하는데 기여한 4명이 특별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